

비상근복무 예비군 선발 '토사軍 팽'?… 예비군 불신 증대

예비군 자원 수도권 집중 불구
동원사단 비상근예비군복무 중단
예산뿌리기식 선발 면질 주장도

육군의 '단기복무 비상근예비군' 선발 방식 변경을 놓고, "예비군 편익을 도모했다"는 육군본부 동원참모부와 "제도 취지와 멀어진 선발방식"이라는 일선 예비군 및 전문가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육군은 지난 5일 연간 30일이내 소집이 가능하고 15일 내외로 복무하는 단기복무 비상근예비군 선발공고를 발표했다.

◆육군, 비상근복무 예비군 늘렸지만 취지와 멀어져

13일 육군은 이번 선발방식 변경에 따른 비상근복무 예비군의 불만에 대해 "내년에도 3500여 명에 달하는 비상근복무 예비군을 선발하기 위해 지난 9월 초 선발계획을 공지했다"면서 "올해부터는 지원점수체계 기능을 개선해 부대, 직책, 계급, 병과, 군경력 등을 세분화함으로써 지원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재적소에 필요한 우수한 예비군을 선발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지만 비상근복무 예비군들과 전문가들은 비상근복무 예비군제도가 숙련된 우수예비군을 장기간 효율적이고 즉응성 있게 활용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신규전역자의 부업을 제공하겠다'는식의 예산뿌리기로 변질됐다고 주장한다.



2018년 4월 6일 경기 용인시 3군사령부(현 지상작전사령부)에서 열린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창설식. 비상근복무 예비군들은 동원전력사령부 예하부대에서 복무한다. /뉴스스

내도 모집인원은 올해보다 다소 늘어난 3547명이지만, 병복무자가 상당수 포함됐다. 하지만 병의 짧아진 의무복무기간과 3년간 사실상 마비된 예비군의 훈련소집 등을 고려하면 미숙련자의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숙련된 간부출신과 달리 구형 동원장비를 잘 다룰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예비군 인적 자원이 몰린 수도권에 위치한 동원사단에서 소령 이상의 검증된 비상근예비군 복무를 중단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비상근복무 예비군들은 복무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로 먼저 꼽았다. 육군은 그동안 비상근 복무에 성실히 임한 숙련된 우수 예비군을 장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동원전력사령부 예하 부대에서 다음해에도 계속 복무할지 여부를 묻고 지원신청 절차를 지원해 왔다. 그렇지만 2023년 '단기복무 비상근예비군' 선발은 예비군 홈페이지와 앱으로만 지원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두 번째 문제는 군사복무 경험이 풍부

하고 전역 후에도 예비군으로서 부대 종·창설 업무에 밟은 영관급 '단기복무 비상근예비군'의 직위 수를 크게 축소했다는 점이다. 동원전력사령부 예하 5개 사단에 골고루 편성됐던 영관급 예비군의 보직을 전부 없애고, 동원지원단과 민사여단 등에만 복무할 수 있도록 보직 수를 감축해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미 육군은 2021년도 비상근복무 예비군 선발 때에도 비상근복무를 하며 현신과 모범을 보여 예비역 진급을 한 영관 장교 다수를 편제에 맞지 않는 '비적소 인원'으로 분류해 선발에서 탈락시켜 왔다.

◆우수 예비전력 확보보다 미숙련자 일당주기가 먼저?

때문에 비상근복무 예비군들 사이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으면 팽되는 개가 된다"는 불신감이 싹터 왔다. 우수 복무자의 빈 자리를 '서브잡'으로 생각하는 미숙련자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우려와 불만도 끊어왔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과 2021년 사설상 비상근복무 예비군의 소집의 중단되면서 비상근복무 예비군의 의견이 전달될 소통 창구도 닫혔었다.

이런 문제에 대해 비상근복무 예비군의 복무기회를 크게 늘린 초대 동원전력사령관 구원근 장군(육군 소장 전역)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비상근복무 예비군은 우수한 예비전력을 장기간 즉응성 있게 활용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면서 "복무성실 등 우수함을 인정받

아 예비역진급을 한 예비군이 비적소 인원으로 분류돼 복무를 이어갈 수 없다면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무의미한 진급을 남발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동원전력사령관 재임시절 예하부대 소속 비상근복무 예비군을 주요회의에 참석시키는 등 적극적인 소통을 해왔던 것으로 정평이 난 구원근 장군은 육군본부 동원참모부와 동원전력사령부에 예비군과의 소통의 부족한 것도 지적했다.

그는 "제도시행을 하는 군실무자들이 일선의 어려움과 현실을 헤아리지 못하면, 짧은 기간임에도 큰 성과를 내온 비상근복무 제도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서 "제도변경과 개선은 실수요자인 예비군의 입장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우수한 예비전력 확보에 노력을 아끼지 않는 군사선진국들처럼 비상근복무 예비군의 근무지 전환 기회 확대, 편제보직의 유연성, 예비군 진급 가능 계급의 확대 및 수임군부대에 필요한 맞춤식 선발 등이 절실히 강조했다.

복수의 군사전문가들은 "과학기술 강군을 만들겠다"는 육군의 입버릇과 달리 관련학위를 가진 장교들이 복무정년을 보장받는 것과 비슷한 문제"라면서 "군인사법, 국군조직법, 병역법 등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 우수인력의 누수는 막기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화철 기자 captinm@metroseoul.co.kr

"우윳값 최대 600원 ↑"… 밀크플레이션 임박

16일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최
이후 별도 소위원회서 원유가 협의
원유 리터당 47~58원 인상 전망
빵·치즈 등 원유 함유 먹거리 비상

정부와 낙농가는 원유의 용도별 차등 가격제 도입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하면서 그간 중단됐던 원유 기본 가격 인상 논의도 조만간 재개된다. 원유 기본 가격이 생산비와 연동돼 오르다보니, 국제 사료값이 크게 오른 점 등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수준의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원유를 원재료로 하는 우유를 비롯해 빵과 치즈, 버터, 아이스크림, 커피 등 원유가 들어가는 먹거리 물가가 줄줄이 오르는 '밀크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된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낙농제도 개편을 위한 낙농진흥회 이사회는 오는 16일 개최될 예정이며, 추후 원유 기본 가격 인상 협의를 위한 별도의 소위원회가 구성돼 논의가 진행된다.

정부는 원유 기본 가격이 리터당 47~58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원유 기본 가격은 생산비와 연동돼 책정되는데, 2020년 이월된 생산단가 인상분인 18원에 올해 생산단가 인상분 34원을 합친 수준이다.

앞서 업계 1위 서울우유협동조합은 독자적으로 원유 가격을 인상 최대치인 리



서울시내 대형마트를 찾은 한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 /뉴스스

터당 58원 인상했다. 낙농가는 국제 사료값 인상분과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하면 최대치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원유 기본 가격이 리터당 21원 올랐을 때 유업체들이 우유가격을 평균 5.4% 인상한 것을 감안하면, 원유 가격이 지난해보다 약 3배 가까이 인상될 수 있고, 우유가격 역시 비슷한 수준의 인상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우유가격이 최소 400원~600원 까지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유 가격이 오르면 우유를 주재료로 하는 치즈와 버터, 아이스크림, 빵과 커피 등 관련 제품 가격도 연쇄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원유 가격은 낙농가와 유가공업체가 협의해 결정돼야 한다면서도, 최근 물가 상황을 감안해 인상폭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원유 가격은 생

산자와 유업체간 협상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다만, 원유가격 인상시 가공제품 인상요인이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정부 차원에서 유기공업체에 가격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는 등 다양 한 반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와 낙농가는 국산 원유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등의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내년부터 전체 원유 중 약 5% 이내를 가공유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생산비 이외 수급 상황을 반영하는 가격결정 시스템을 만들고, 낙농진흥회 이사회에 소비자와 함께 등 중립적 인사 참여를 확대하는 등 의사결정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다만,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 개편은 의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기업 인증부담 줄인다 수수료 줄이고, 인증 유효기간 늘려

산업부, '인증제도 개선방안'
인증 기관 해외 진출도 지원

년으로 확대하고, KS인증 등 유효기간도 4년으로 늘린다.

또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KS인증, KC안전인증(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및 계량기 형식승인의 인증심사 수수료(현장심사)를 20% 감면하고 접수 비용을 면제한다.

한 제품임에도 다수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의 경우 기업에 최적의 인증 취득·유지 비용 등이 기업 활동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럽 CE, 미국 UL 등 주요 수출국 해외인증을 국내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국내 인증기관과 해외 인증기관 간 업무협약을 확대하고 국내 인증기관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장영진 차관은 "이번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개선방안으로 기업의 인증부담이 완화되고, 국내외 인증취득에 대한 지원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 자체 규제혁신TF를 통해 소관 인증제도에 대해 통합·폐지·개선 등을 강구해 나가고, 국조실 등과 협력해 정부 인증제도를 지속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